

다수경제 (Majority Economy) 와 소수경제 (Minority Economy) — 韓國經濟開發戰略의 特性에 관한 연구 —

徐 南 源 *

〈目 次〉

- I. 서 론
- II. '이분대응' 분석접근의 구성
- III. 경제개발전략의 유형에 관한 모형
- IV. 한국사회의 경제개발의 기본전략
- V. 한국경제개발전략의 중요 과제별 방안
결정—공업부문
- VI. 다수경제전략과 소수경제개발의 종합
특성
- VII. 다수경제사회와 소수경제사회
- VIII. 결론 : 한국경제개발전략의 전환 전망
각 주

I. 서론

한국경제가 이제 5차에 걸친 5개년개발계획의 집행을 거듭한 끝에 개발도상권에서 이탈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 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경제의 발전은 현저하고 급속한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의 소산임에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하여 한국경제는 성취되었다고 하는 수준에 비하면 미진한 과제가 허다히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사회의 앞날을 위해서는 선진권으로의 진입이 불가피하고 그러면 이는 지난날의 경제개발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분석을 가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의 제도수정을 이룩해야 하는 것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기본적 견해하에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실행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본 논문의 작성은 고려대학교의 교수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이다.
또한, 최초로 발표된 내용을 인쇄요건에 부합되도록 집약한 것이다.

에 옮겨진 주요정책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앞날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할 정책과 영입되어야 할 정책의 유형적 차이를 발견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개발에 적용된 경제정책의 내용과 그 결과를 서로 연결을 시켜서 분석하는 전통적 방법을 구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정책을 총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작업량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을 경제사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전략방안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이분대응법’이라는 특별한 방법론을 구사하여 ‘유형적 특성(Pattern Characteristics)’을 규명하기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의 결론이 되는 한국경제에 관한 경제개발전략의 특성에 따르는 경제사회의 유형적 성격을 이론적으로 설명함에 있어서도 ‘다수경제(Majority Economy)’와 ‘소수경제(Minority Economy)’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기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본 논문은 지난날의 한국의 경제개발의 실례로부터 경제개발 및 경제사회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미래시점에 있어서의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개발전략의 전환특성을 제시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된다.

II. ‘이분대응’ 분석접근의 구성

본 논문에서 기본적으로 활용이 되는 분석방법은 ‘이분대응법(Dichotomical Comparative Method)’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러면 이 방법은 무엇보다도 경제학의 논리가 거의 모든 경우에 ‘상대적 비교’ 원리에서 출발이 되고 있음에 유의하고, 한국 경제의 개발에 있어서 중요시 되어 온 경제정책을 복수적인 대체적 전략방안(Alternatives)이 있는 분석관점으로 설정을 하고, 이들 방안들 가운데에서 한국경제가 선택한 방안과 다른 경제사회에서 발견이 되는 동시에 서로 대응이 되는 또하나의 전략방안으로 짝을 짓고, 이에 대한 비교논평(Comparative Critics)을 가하는 방식을 분석 접근을 위한 방법으로 설정을 함이 타당하다.¹⁾

1) ‘이분대응’ 분석법의 최초의 적용례는 논자의 저서인 「한국경제의 미시적 분석(개제: 낭비 홍수)」(서울: 무역경영사, 1981)에서 찾아 볼수 있다. 그리고 이분대응법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경제개발전략의 연구의 예는 Walter B. Stohr & D.R. Fraser Taylor, *Development from Above or Below, The Dialectics of Regional Planning in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1)이다.

Ⅲ. 경제개발전략의 유형에 관한 모형(경제개발전략의 의사 결정자의 특성)

본 논문에 있어서 경제개발을 위한 전략방안의 특성연구는 대체적 방안들의 발상과 선택에 관한 논리에 근거를 둔다. 그러면 본 논문의 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경제개발전략이 출현하는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논리전개의 대전제로 활용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모형은 본시 미시경제학의 일부를 구성하는 의사결정론(The Theory of Decision Making)에서 유도하기로 한다.

경제개발을 위한 전략의 출현은 한 경제사회의 의사결정자들(Decision Makers)의 선택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물론 특정전략의 출현이 경제사회내의 지배적인 사상, 제도 및 체제의 영향을 안받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전략방안에 관한 이론, 주장, 기대 등은 다름아닌 의사결정자들의 다분히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달려있다. 환언하면 개발전략의 방안은 명목상으로는나 실재를 막론하고 의사결정들의 실질적 이해관계의 편의성을 반영하여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의사결정들에 관한 논리를 본 논문의 기초적 모형이론으로 삼기로 하고 여기에 본 논문의 기본접근법인 '이분대응법'을 적용하면 두가지 의사결정들의 유형이 상대적으로 구분대응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설정하는 두가지 의사결정의 유형은 특정소수(The Limited Few:LF)형과 불특정다수(The Unlimited Mass:UM)형이다. 그러면 LF형은 동일한 개인적/사회적 이념, 목표, 또는 이해관계에 관련자에 한하여 의사결정과정에는 참여가 허용이 되는 폐쇄적 의사결정체의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UM형은 대조적으로 개인의 경제사상, 목표, 그리고 사회적 위치에 관계없이 의사결정의 제반과정이 모든 관심자에게 분산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사결정의 폐쇄성/개방성의 여부는 광의적으로 해석이 될 필요가 있다. 즉 본 모형에 의한 의사결정체는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기구에 한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그 과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경제주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경제활동으로 전반에 걸쳐서 경제권한이 확산이 되어 있어서 경제기능이 소단위의 다수에 의하여 독자적인 수행이 되는 경우는 UM형, 그리고 경제계획자가 경제개발사업의 실행, 경제기능의 관리, 그리고 평상적 거래에 대해서 까지도 규제를 하는 것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다할지라도 모두가 LF형으로 개념화가 되는 것이다.²⁾

2) 따라서 본 분석모형에 의하면 경제학자 Mises의 자유주의경제는 UM형으로, 그리고 경제사상가 Marxist가 타도를 목표로 하는 독점자본주의 경제와 그리고 이상으로 추구하는 사회주의 경제는 공히 LF형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경제사회의 개발전략의 특성도 역시 두가지 유형으로 개념화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의사결정자의 특성인 UM형과 LF형에 대응시켜서, 경제개발의 전략특성을 다수경제전략(Strategy for Majority Economy)과 소수경제전략(Strategy for Minority Economy)으로 유형화를 하는 것이다.³⁾

IV. 한국사회의 경제개발의 기본전략

한국사회의 경제개발은 기본적으로 5차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의하여 추진이 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개발전략을 총체적으로 생각하여 볼 때에는 계획기간동안에 수시로 발표된 주요경제정책의 수립과 변경, 매년마다 발표된 '신년도 경제시책', 그리고 공개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 시행된 경제행정상의 결정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언하면 경제개발전략의 본질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제사회의 변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과 과정을 총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분석시각하에서 한국사회가 실제로 선택시행하여 온 경제개발전략의 특성을 기본적 관점에 관하여 '이분대응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A-1) 경제성장전략 : 안정성장(Stable Growth) <=> 고도성장(Rapid Growth)

경제개발의 보편적이며 가장 핵심적인 전략과제는 설명의 필요도 없이 경제성장이다. 그러면 이에 관한 대응적 방안으로는 안정성장과 고도성장을 들 수 있다. 안정성장은 간단히 말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물가안정을 위협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성장을 시도하는 것이고, 고도성장은 단기적인 시야로 다분히 수치적인 최대의 성장율을 실현하는 데에 전력투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면 한국경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고도성장에 일관하는 성장전략을 추구하여 온 것이다. 80년대에 들어서서 5%이하의 성장율을 감수한 것은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투자조달의 능력을 상실한 까닭이었다.

그러므로 고도성장의 전략방안은 보편적인 타당성이 인정된 까닭에서가 아니라 한국 경제사회의 의사결정체가 특정소수의 폐쇄적 유형을 갖추므로 인해서 선택실행이 된 결과로 단정함이 옳은 것이다. 만일에 의사결정체의 구성유형이 불특정다수를 가리키는 개

3) 다수경제전략과 소수경제전략의 정의는 본론에서 귀납적으로 상술된다. 그리고 후장에서 더욱이 경제사회를 유형화하는 두가지 대응적 요인으로 전환이 된다.

방된 유형이었다면 안정성장의 방안이 선택되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고도성장전략이 경제성장에 일단의 효과가 없는 것은 성장후의 경제사회의 구성은 고도 성장과 안정성장의 경우에 현저하고도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이다. 더구나 장기적으로 볼 때에 평균적 성장율에 있어서나, 그리고 일인당 국민소득에 있어서나 안정성장이 보다 앞 설 수 있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고도성장의 방안은 결코 의사결정체 들의 자의적 선택심리가 작용한 소산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한 것이다.

(A-2) 산업구조전략 : 자생적 균형화(Self-Sustained Structure) <=> 산업고도화 (Intensively Industrialized Structure)

경제개발에 있어서 기초적인 전략과제의 하나는 산업구조에 관한 것이다. 경제사회의 발전이 장기적인 안목하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산업구조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있어서 과연 어떠한 산업구조가 최적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정답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산업구조고도화는 일견하여 경제개발의 진전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이해되기가 쉬우나 실은 불균형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므로 자연/균형구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비능률적인 전략선택이다. 연이나 한국경제는 가장 기본적인 채산성을 전연 배려치 않은 중화학분야의 대량투자를 단행하여 전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조성한 바가 있었다. 그러므로 산업고도화전략의 채택도 순수한 경제개발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의사결정체의 특성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의사결정체의 유형이 LF형인 까닭으로 소수경제의 특성의 하나인 산업구조고도화가 개발전략안으로 채택이 되었다는 것이다.

(A-3) 경제잉여집중전략 :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 <=> 기업보호(Firm Protection)

경제사회의 개발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에서 발생하는 경제잉여(Economic Surplus)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경제잉여의 축적은 어느 경제과정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일을 수반한다. 그것은 경제잉여가 경제사회에

4) 산업고도화전략이 아니라도 경제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실례는 대만경제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대응전략의 예는 별도 언급이 없으면 대만경제의 경우를 가리킨다. 대만경제에 관한 자료는 주로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86에 의거한다. 그리고 대만이외의 경제에 대해서는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6(Th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pp. 169 ff)에 의거한다.

널리 확산 축적이 되는 경우에는 투자재원으로의 동원에 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경제인여를 주로 기업부문에 축적시키는 전략과 그리고 소비(가계)부문에 집중시키는 전략이 대응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전자를 기업보호주의, 그리고 후자를 소비자보호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면 기업보호주의/소비자보호주의에 따르는 전략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으나 전자는 가계를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방안들이고, 후자는 기업의 도태를 소비자에게 위임하는 일련의 방식을 뜻하는 것이다.⁵⁾

그러면 한국경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기업보호전략을 고수하여 왔음으로 분명히 기업편중의 잉여발생효과를 실현한 것이 의심되지 않는다. 즉 한국경제는 경제사회의 각 분야에 잉여가 분산이 되기 보다는 투자재원의 동원이 신속유리한 방안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 그런데 기업보호전략은 다른 관점에서 경제개발의 진전을 허다히 방해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부실기업의 정리지연이다. 또한 경제불황이 나타나면 정부지원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데에서 비롯된다는 견해가 만연되고 있는 것도 전략의 병폐라고 할 수가 있다.

(A-4) 고용창출 : 자영자고용(Self-Business Employment) <=> 산업고용(Industrial Employment)

모든 경제사회에 있어서 경제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복지수준의 향상에 있는 것이고 이는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고용기회의 창출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경제개발의 우열은 원칙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에서 평가가 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요성을 지닌 고용을 창출함에 있어서는 피고용자 스스로가 고용기회를 마련 하는 자영자고용방식과 그리고 대기업이 마련하여 주는 산업고용방식이 있다. 그러면 이양 방식은 필히 기업의 출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다분히 전자는 규모가 작은, 그리고 후자는 규모가 큰 기업의 출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연이나 한국경제에 있어서는 산업고용방식을 택하여 온 것이 분명하다. 이미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산업고도화(A-2)나 기업보호(A-3) 등이 고용창출효과가 다대하다는 명분하에 추진된 것인데, 따라서 고용전략은 적어도 자영자고용을 무시한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 만일에 자영자고용을 중시하는 것이라면 한국경제수준을 능가하고 있는 동남아세아의 몇 개발도상 경제와 같이 소위 창업기업정책을 자영자고용의 방편으로

5) 구체적으로 소비자보호전략은 시장경쟁의 강화를, 그리고 기업보호전략은 시장독점의 허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강력하게 추진하였을 것이다.⁶⁾ 그러므로 고용창출의 전략을 보아서도 한국경제의 개발전략의 특성은 소수경제의 유형을 선명히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A-5) 투자자본조달전략 : 개인신용금융(Private Financing) <=> 공공신용금융(Public Financing)

경제개발이 긴급히 요청되는 경제사회일수록 자본축적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개발투자를 위한 자본을 해외로부터 조달하는 문제는 예외적이라기 보다는 당연히 기대되는 전략과제이다. 그런데 저개발사회의 신용도는 단순히 저개발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빈약함을 면치 못하는 것이 어김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개발초기에 있어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국내외적으로 신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의 자금조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신용을 활용하는 방안을 착안하게 되었다. 즉 경제개발의 의사결정자들은 대외적으로는 외자도입법을 제정하여 국가적 상환보장을 민간기업에 공여하고, 대내적으로는 은행지불보증으로 대신토록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공신용도 한도가 없을 수 없으므로 당연히 극히 제한된 기업만이 활용의 혜택을 보는 것이며, 따라서 한국경제의 자본조달방안은 폐쇄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을 위해서는 투자자본의 조달전략에 있어서도 소수경제의 논리가 반영되고 있음이 분명하여 지는 것이다.

(A-6) 물가—통화량전략 : 안정기조(Stabilization Priority) <=> 자금공급기조(Investment Priority)

모든 경제사회의 보편적 목적은 이미 수차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생활의 향상이다. 그런데 경제적 생활향상은 외형적으로는 생활규모의 확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회대중의 입장에서는 생활여건의 안정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이상론을 고집하는 사회주의 사회를 제외하면 경제개발의 기본전략의 하나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통화량의 증가를 최대로 억제하는 방안을 고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기업의 투자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경제안정에서 얻어지는 가계의 저축증대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기업에 공급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따라서 통화량의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피 수반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해서도 한국경제의

6) 한국경제는 근자에 대만경제에서 장기간 실행한 결과로 고용창출효과가 인정된 창업기업 유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한된 자금지원책에 그치고 있어 고용전략으로는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개발전략은 지금까지 분석한 여러 전략방안과 동일하게 의사결정의 대상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소수경제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V. 한국경제개발전략의 중요 과제별 방안결정—공업부문

지금까지 분석한 한국경제개발의 몇가지 기본전략은 효과적인 실행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세부적인 방안들을 당연히 수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개발 전략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부적인 의사결정 방안들을 분석검토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업부문과 관련된 중요과제를 선정하고 각 과제에 대하여 역시 이분대응분석을 적용하여 그 특성을 논하기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 추출된 특성들은 전절에서 본 바와 같이 '소수경제전략과 다수경제전략'의 개념을 구성하는 실증적 내용으로 수렴 설정이 되는 것이다.

(B-1) 기업육성대상결정 : 중소기업우선(Small Business Support) <=> 대기업우선 (Big Business Support)

기업전략의 하나로 고찰한 경제잉여집중(A-1)에 있어서 가계부문보다도 기업부문을 선택한 한국경제의 의사결정자는 기업의 육성에 관한 여러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긴요한 의사결정의 요점은 육성대상기업의 선정기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경제, 다른 경제사회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우선적 육성방안이 선택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장기간 실행에 옮기는 실례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은 지난날의 수차에 걸친 5개년계획의 공업부문의 편성이, 중소기업에 관한 극히 간략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대기업에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에 충분히 입증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계획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중요정책이나 행정지침을 분석하여 보면 명확히 알 수가 있다. 즉 중화학공업의 집중건설, 종합무역상사의 특혜육성, 금융기업의 자본화대유도 등을 비롯하여 계획사업실수요자 선정원칙, 수출입업허가기준, 합작투자자격요건, 건설공사수주자격선정기준, 그리고 공단입주기준 등은 분명히 대기업우선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육성에 있어서 대기업 우선 방안은 기업부실화 방지, 규모 경제의 추구, 그리고 산업공업화의 촉진 등의 명분으로 지탱이 되었지만 본 논문에서 문제시하는 사실은 대기업육성에 치중하는 방안선택은 중소기업육성에 보다 역점을 두는 정책에 비하여

소수경제의 특성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⁷⁾

(B-2) 생산방식 결정 : 노동집약적 생산(Labor-Intensive Production) <=> 자본집약적 생산(Capital Intensive Production)

모든 경제사회에 있어서 기업이 공공적 자원/지원으로 육성이 되는 까닭은 모름지기 해당 되는 기업의 존립과 성장이 경제사회의 필요한 바에 대하여 기여가 된다는 것이며, 그 기여의 내용이나 수준은 공공적 혜택이 없는 기업의 경우를 상회해야 되는 것임은 당연한 기대라고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기업보호방안(A-3)도 사회대중에게 보다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추진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기업우선전략은 중소기업우선전략에 비하여 고용효과면에서도 보다 큰 기여가 기대되는 것이고, 따라서 대기업의 생산방식은 자본집약적이라기 보다는 노동집약적이어야 하는 것임은 당연한 이치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에 있어서 대기업이라고 하면 선진사회로부터 다분히 자본집약적 생산방식을, 그것도 노동력을 최대로 배제하는 선진사회로부터 도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우선전략은 타의적인 생산방식의 결정과 아울러 분석을 할 때에 고용창출의 면에서도 최적의 선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경제의 의사결정의 성격은 경제개발을 위한 생산방식의 대안선정에 있어서도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다수경제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C-1) 수출증대결정 : 수출이득최대화(Export Surplus Maximization) <=> 수출외형최대화(Export Scale Maximization)

경제사회개발의 일면은 재화생산의 확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장을 발견하고, 충분한 매출을 실현토록 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사실상 시장의 존재가 경제개발의 필수적 요건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이 낮은 경제사회는 국내시장이 빈약한 것이므로 부득이 해외에서 시장을 발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경제도 개발초기부터 수출증대를 경제개발의 매우 중요한 전략과제로 설정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경제사회는 수출증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출잉여최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경제는 수출외형최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온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수출목표를 매년마다 외환수입 규모를 가리키는 수출액으로 설정하는 데에서 용이

7) 여기서 인용되는 경제사회는 물론 대만이다. 즉 중소기업육성에 치중을 한 대만은 오늘날 거의 모든 경제지표항목에 관하여 개발초기에 비하여 개선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op. cit., 참고)

하게 알 수 있지만, 또한 LC기준에 의한 자동특혜용자와 그리고 수출규모에 따른 기업포상제 등에 의해서도 명확하게 파악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경제는 수출방안의 선택에 있어서 기업의 내실화보다는 외형적 팽창을 중요시하는 특성을 지니는 것임을 발견케 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 사실상 의사결정에 있어서 외형문제에 관심이 돌려지는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고도성장전략(A-1)의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것은 성장율계산이 잉여발생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외형생산액을 근거로하고 있는 까닭이다. 여하간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특성을 그 유형상 특정소수형을 나타내는 소수경제의 또하나의 특징으로 설정을 하기로 하는 것이다.⁸⁾

(C-2) 수출목표결정 : 전망목표접근(Export Forecast Approach) <=> 계획목표접근(Planned Export Approach)

수출확대전략을 추진하는 구체적 방법의 하나로 수출목표를 설정하는 문제를 결정짓는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과거 수출실적, 수출상품생산능력, 해외시장상황 등을 근거로 하는 예측기술이 동원되어 장단기 수출증대의 구조와 수준에 관한 설계도가 작성이 된다. 그러면 모든 선진사회를 비롯한 개발도상사회는 이 수출구상을 오직 '전망'으로 간주하고 수출관련 기관은 이에 따른 신축성있는 대비를 강구하는 접근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수출구상을 '계획'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달성을 위해 총행정력을 투입하여 오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직적 수출목표 달성방식은 수출증대결정(C-1)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해외바이어들과의 가격교섭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입장을 면치 못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경제의 무역균형의 호전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을 형성하는 것이다.

여하간 이와 같은 관료주의적 대안선택은 본 논문이 제시하는 소수경제전략특성의 하나로 간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참여가 폐쇄된 의사결정자가 경직성이 강한 접근을 시도할 때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부문/분야/계층은 실질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축을 당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소수경제는 그 성격상 불균형적 전략을 선호하며, 따라서 그 성과는 불가피 불균형적인 경제형성으로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를 새로이 발생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8) 대만경제는 1952년 이래로 1975년을 제외하고는 무역제정에 적자를 나타낸 바가 없다. 따라서 내실 성장의 장기적 결과는 보다 효율적인 경제발전을 초래하는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대만경제의 현황과 평가」(1985. 3)가 참고된다.

(D-1) 개발자금배분결정 : 수익성우선배분(Profitability-Oriented Allocation:POA) <=>
매출외형 우선배분(Revenue-Oriented Allocation:ROA)

모든 경제사회에 있어서 개발자금은 수요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것이므로 의사결정자는 자금배분에 관한 방안결정을 회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점에 관하여 선진사회와 많은 개발도상에 있는 사회는 최적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전지에서 수익성이 우수한 개발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자본배분에 있어서 매출외형 규모를 중요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하여 외자를 포함한 모든 자금에 대하여 효율적인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매출외형기준 배분은 일단 개발전략상 성립되는 결정으로 보인다. 즉 첫째, 산업고도화(A-2)에 의하여 대사업에의 자금투입에 불가피하고, 둘째, 자본집약적인 생산 방식의 채택으로 (B-2)회임기간이 길고, 셋째, 공공신용의 대외활동으로 (A-5) 상환자금조정이 문제가 되는 까닭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이와 같은 상황은 부채액이 방대한 기업이 최소한의 자금회전으로라도 기업부실화를 모면하려고 하는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경제의 자금배분은 순수한 개발투자의 목적을 위해서라기 보다 기업의 종합적 자금수요를 충족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⁹⁾

(D-2) 자금비용결정 : 단일/변동이자율(Single/Flexible Rates) <=> 복수/고정이자율
(Multiple/Fixed Rates)

경제개발에 있어서 기업이 투하하는 자금의 원천에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두 종류가 있다. 그러면 타인자본을 사용하는 경우는 기업의 신용여하를 막론하고 차입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사회는 자금사용면에서 형평을 이루도록 하는 것인데, 특히 자금제공을 장려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금비용은 기업에 대해서 기업비용을 부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으로 하여금 이자를 발생케하여 경영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비용의 비율과 방식은 경제개발의 유형을 판가름하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 즉 기업에 유리한 방식을 택하면 소수경제전략이, 그리고 가계저축자를 포함하여 경제사회전반에 균형을 이르는 배려가 있는 것이라면 다수경제전략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9) 대만경제는 개발초기부터 수출가득을 위한 자금배분에 분산방식을 택하였는데 그 결과는 70년대 중반이후로 대외순자산잔고, 수출신장율, 수출총액등에 있어서 매우 괄목할 호전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op. cit., 가 참고된다.

그러면 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이자체계를 단일율 대복수율, 그리고 변동율 대 고정율로 대응을 시킨다. 즉 단일/변동율은 다수경제전략으로 그리고 복수/고정율을 이라면 소수경제 전략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경제는 상당기간은 전면적으로, 그리고 현재는 일부에 있어서 복수/고정율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정책자금의 차등금리 적용, 은행협정금리제도, 그리고 예외적 연체율적용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자체계는 기업자금비용의 결정권한이 금융분야에 위임되지 않고 경제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의사결정체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복수/고정율의 적용은 어김없이 소수경제의 선택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분석을 일반화하면 소수경제의 개발전략은 경제이치보다는 행정편의에 의거하는 방안을 선택실행하는 경향을 지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⁰⁾

(E-1) 중소기업육성결정 : 자체성장지원(Independent Growth Support) <=> 계열화지원(Alignment Growth Support)

이미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경제의 기업육성 전략(B-1)은 대기업우선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육성에 대하여 전략을 전면 거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5개년계획기간에 중소기업성장계획은 별도의 유리된 상태로 작성발표되는 것이 관례로 정착된 것이다.¹¹⁾

그러면 한국경제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본전략은 전통적으로 계열화방안이었다. 즉 대기업과의 연계에서 성장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다만 근자에 와서 독자적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대기업의 침투(Encroachment)로부터 보호하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략방안은 경제적으로 선진화를 달성한 모든 사회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대기업을 앞지르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는 데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의사결정자들의 대기업 우선의 타성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다.¹²⁾ 그리

10) 복수/고정율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은 1950년대까지의 외환매도에 적용하였던 복수/고정체계의 환율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11) 계획기관(Planning Board)에는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행정/연구부서가 없었으며, 따라서 실행기관에 국(Bureau)을 두고 중소기업육성의 모든 문제가 관장되었다.

12) 선진/개발도상사회의 중소기업비중에 관한 제통계는 「중소기업경제지표-1986」(중소기업진흥청공단, ■, 주요국의 경제지표)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극히 최근에는 경제계획당국에서 고용효과면에서는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의 기여가 다대하다는 의견을 공식으로 발표한 바 있으나 실행면에서는 아직 중소기업의 육성을 우선하는데에 대한 팔목할 만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하여 중소기업 육성전략에 있어서도 한 소수경제전략의 특성을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E-2) 중소기업금융지원결정 : 특수금융제도화(Separate Financial Practice) <=> 일반 금융제도(General Financial Practice)

중소기업육성에 있어서 금융지원은 가장 핵심적인 지렛대 역할을 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자산규모가 왜소하므로 담보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선진경제사회에서는 중소기업가의 개인신용이나 기업성을 근거로 하는 이른바 무담보용자를 실시하는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그런데 연이나 협동화에 있어서 자체운영이 허용되지 않은 한국경제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들의 금융은 물적담보를 전제로 하는 일반신용방식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서 중소기업의 담보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자 한국경제의 투자자본조달에 관한 기본전략(A-5)에 따라서 공공신용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보았으며, 이는 바로 신용보증으로 기금전담은행의 출범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신용보증기구가 한국경제에 있어서는 신용보증 규모의 절반이상을 대기업에 돌리는 실태를 보임으로써 최대의 성과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금융지원방식의 결정에 있어서도 한국경제는 의사결정권한의 소재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집중시키는 방식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소수경제전략의 단면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VI. 다수경제전략과 소수경제전략의 종합특성

지금까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개발전략은 이분대응법을 적용하였을 때에 소수경제전략(Minority Economic Strate)으로 규정될 수 있음이 판명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경제는 개발전략의 방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한국경제의 기본형성에 따른 제약의 작용에도 불구하고 농촌개발에 관한 몇가지 기본전략결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경우에 경제사회의 활동에의 참여를 소수적으로 제한-폐쇄하는 양상에 적합한 방안들을 선택하고 실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선택결과는 이미 선진화를 달성하였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개발되고 있는 다른 경제사회의 전략방안, 즉 의사결정체가 확산-개방적인 양상에서 출현한다고 보는 전략방안들과 좋은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분대응법을 적용하여 한국경제의 개발전략특성을 소수경제전략, 그리고 대

음이 되는 특성을 다수경제전략(Majority Economic Strategy)으로 부르기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소수경제전략의 경제학적 의미를 더욱 명확히 정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 즉 소수경제전략은 무엇보다도 다수경제전략과 상대적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개발철학, 전략체계 방안구상, 선택기준, 그리고 실행 등의 전 전략과정의 총체적 특성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경제사회의 개발은 '소수'의 특징을 강력히 반영하였을 때에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된다는 주장과 그 실천이 나타나고 있는 유형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소수'라고 하면 다분히 경제사회의 정예층을 가리킬 수도 있으나 의사결정기능이 확산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모름지기 예외가 되지를 않는다.

이와 같은 '소수'주의가 구체적으로 소수경제전략을 발생시키는 이치에 대해서는 이미 전략과 개별분석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소수'주의와 소수경제전략과의 관계를 재조명하기로 한다. 경제사회의 개발에 있어서 '소수'주의는, 첫째 이미 서론부분에서 논한바와 같이 전략수립과정에 대한 참여자의 제한에서 비롯된다. 그러면 다분히 정예적인 '소수'결정자는 자신의 편의위에서 고도성장을 선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한된 분야에 집중투자를 하며, 또한 이를 위한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며, 이를 위하여 공공신용으로 창출된 자금을 편중배정하고, 그리고 또 발전유지하기 위하여 관련된 전략결정을 조절을 하는 것이다. 만일에 이와 같은 전략의 추진으로 한계기업이 발생하면 소수의 편의를 위해서 준공공기업화의 조치를 취하여 편의를 도모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수'주의에 의한 개발전략의 일관되고 연계적인 선택은 다른 전략방안의 체계적인 선택을 배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경제개발전략에 관한 분석접근으로 '소수경제주의'와 '소수경제전략'이 성립하는 것이다.

또한 대응적이면서 동일한 맥락속에서 '다수경제전략'이 개념화 될 수 있다. 즉 경제개발에 있어서 소수주의에 대응하여 '다수'주의가 중시되어 전략방안의 결정이 가급적 모든 당사자에게 위임이 되는 즉, 경제사회의 모든 진행에 가급적 다수인의 직접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과 실천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경제사회는 자발적 의욕과 창의력의 발휘로 개발목적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성립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수경제주의자는 의사결정을 개방하는 것인데, 이를 위한 방법은 경제계획을 경제전망으로 대신하고 모든 경제사회분야가 안정적으로 자체능력에 따라서 최선의 활동을 전개하도록 조정적인 기능을 가장 중요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안정성장을 추구하고,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에 공공력을 투입하며, 이를 위하여 창업자본시장을 개척하며, 이를 위하여 특수신용금융제도를 강구하며, 이를 위하여 재래적 시장개혁을 지원하며, 그리고 이를 돕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임, 그리고 이와 같은 기회균등의 원리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부실적인 기업/소비자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연도태의 이치에 따라서 해결함으로써 다른 다수에 대한 회생을 가장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수경제전략의 방안들이 일관성있게 체계화되고 특성있는 이론으로 정립이 가능한 것이다.¹³⁾

Ⅶ. 다수경제사회(Majority Economy)와 소수경제사회(Minority Economy)

지금까지 경제사회의 개발전략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경제사회의 변천과정을 중시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사회의 변천의 결과를 비록 다분히 발전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또 다른 경제사회가 되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있어서도 다수경제전략이나 소수경제전략은 궁극적으로 ‘다수경제사회’와 ‘소수경제사회’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이론적 연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다수/소수경제전략은 각각의 경우에 상당기간에 걸친 축적적인 효과로 인하여 서로 대응적 차이가 있는 경제사회를 형성하여 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이 되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수경제사회(Majority Economy)와 소수경제사회(Minority Economy)의 경제사회에 관한 개념적 유형/특성이 제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다수경제사회/소수경제사회의 유형개념은 전통적인 경제사회유형에 관한 여러 사상/이론과는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므로 면밀한 이론화를 위한 고찰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본 논문이 목적하는 바 경제개발전략의 특성개념의 정립을 도우는 관점에서 두가지 대응적인 경제사회의 특성을 개략적인 논리전개를 통해서 추리를 하여 보기로 한다.

(1) 소수경제사회의 유형개념 :

첫째로 소수경제사회는 소수경제전략의 소산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분석한 소수경제전략의 방안들이 경제사회의 형성에 주도적인 요인들로 작용하는 것이 의심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소수경제전략은 경제개발의 주체자들의 참여가 장기적으로 제한됨으로 인하여 경제사회의 개발상태가 집중, 편중화, 급진 및 인위적 조작 등으로 특징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추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소수경제사회는 무엇보다도 경제과정, 생산부

13) ‘소수’ 주의와 ‘다수’ 주의는 철학적으로 생각할 때에 인간심리의 차이에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으로써 전자는 자신의 타인에 대한 우월을 생활신조로 삼는 것인 데 비하여 후자는 어떠한 경우도 자신의 존엄성을 타인의 그것과 동등하다는 데에서 발견하려는 사고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경제사회에 어느 경제의식이 작용하게 되는 것인 데 해당경제사회의 지배적인 인간심리가 어느 쪽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학의 방법에 있어서도 정치경제학의 경우와 같은 당위론과 그리고 미시경제학의 경우와 같은 실증론이 있는데 이 대응논리와 맥락을 같이하는 분석철학으로 보인다.

문이 소비부문보다 비대한 불균형을 나타내며, 산업구조가 고도의 수직화 현상을 일으키며, 생산활동은 모든 면에서 대기업의 점유/비중의 도가 높으며—마찰현상을 내포하고 있기 마련이라고 추리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소수경제사회는 자금, 신용, 소득 그리고 기타 거의 모든 경제력의 분포상태가 편중화를 일으키며, 더 나아가서는 더욱 심화를 야르키고, 또한 기업회전율이 낮으며¹⁴⁾ 공공기업의 비중이 증가를 보이며, 그리고 임금—물가의 패리티는 높게 나타날 것으로 가상할 수가 있다. 또한 고용은 자영자형태보다 산업형태가 많고, 농촌부문의 생활수준은 기복이 심하여 결국은 저조하고, 국민저축율은 낮으며, 따라서 대외채무는 상당한 수준에서 누증현상 또는 적체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수경제사회는 많은 기회비용적 낭비를 발생하여 그 내실적 발전이 지체되는 것이다.¹⁵⁾

(2) 다수경제사회의 유형개념 :

다음으로 다수경제사회는 다수경제전략의 응집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수경제전략의 특징을 생각하여 보면 무엇보다도 경제개발에의 직접적인 참여자가 장기적으로 개방됨으로 인하여 경제사회의 개발상태가 분산, 평준화, 점진화 및 경제적 원리의 보편적 작용 등으로 특징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추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다수 경제사회는 무엇보다도 생산—유통—소비의 경제과정의 균형을 나타내며, 산업구조도 횡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생산활동은 모든 면에서 중소기업의 점유/기여의 도가 높으며, 산업효율은 모든 규모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시장구조는 상사수가 많으므로 인하여 경쟁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개념화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다수경제사회는 자금, 신용, 소득 그리고 기타 거의 모든 경제력의 분포상태가 평준화를 보임으로써 경제평등의 실현이 용이해지며, 기업화를 위한 창의력의 발휘가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이루며, 자영자형태의 고용비중이 크고, 그리고 소비부문의 합리적 활동이 높은 저축율을 통해서 경제사회의 국내자본축적에 기여를 하게 된다. 그리하여 다수경제사회는 기회비용적 낭비가 없어, 경제사회의 내실적 발전이 촉진되는 것이다.¹⁶⁾

14) 기업회전율이라는 것은 기업개설(Firm Entry)과 기업폐업(Firm Exit)의 승수관계로 생각하고 창업기업의 출현과 한계기업의 정리능률을 나타내는 지수로 간주할 수가 있다.

15) 한국경제사회의 기회비용적 낭비에 관해서는 논자 저, 「한국경제의 경제분석」, op. cit을 참조한다.

16) 지금까지 제시된 소수경제/다수경제사회의 개념적 유형에 대한 논의는 엄밀히 말하여 아직 가설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성격을 감안할 때에, 현 단계에서는 이를 더욱 완회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시된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 환언하면 모든 가설은 일반적 통계자료에 근거가 있는 내용들인데, 다만 그 작업을 생략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3) 두 경제사회유형의 대응적 비교

두가지 경제사회의 유형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대응적으로 고찰하여 본다면 우선 소수경제사회는 경제순환이 불균형적이며, 경제질서가 불안정하고 기회손실적 낭비가 허다히 발생하고, 경제불황에 취약성이 강하고, 그리고 사회계층간에 경제적으로 알력이 조성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응적 이치로 다수경제사회는 경제순환과 경제질서가 안정화되고, 기회비용적 낭비가 극소화되고, 경제불황에 저항성이 있고, 그리고 경제균점의 자동적 실현으로 사회계층간에 경제적 알력이 최소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소수경제사회에 있어서는 다수경제사회에 비하여 경제활동이 일반적으로 비능률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역으로 다수경제사회에 있어서는 소수경제사회에서 보다 보편적으로 경제활동이 보다 능률적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다. 동일한 논리로 경제현상의 상응적 조정작용의 진행속도에도 양 유형의 경제사회에 차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자원의 효과적 활용, 경제자원의 효과적 운용, 그리고 경제소비생활의 내실화에 있어서도 막중한 차이를 제시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저개발수준을 보이고 있는 경제사회는 거의 전부가 소수경제사회의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선진수준에 도달한 경제사회는 약간의 예외적 현상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부가 다수경제사회유형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다.¹⁷⁾

그러면 이와 같은 소수경제사회/다수경제사회의 경제능률(Economy Efficiency)의 대응적 차이를 보다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서 경제사회의 성장유형(Growth Pattern)을 고찰하여 볼 필요가 있다. 경제사회의 성장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사회의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성장곡선(Growth Curve)을 가리키는 것인데 경제관리(Economy Management)가 집권화도립 L자형 또는 경사 S자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립 L자형의 성장특성은 경제개발의 초기에 있어서는 경제집중효과로 매우 높은 성장율을 나타내지만 개발중기에 이르러서는 성장속도가 급격히 둔화되어, 개발후에 와서는 마침내 경제성장은 장기적 포화상태를 일으켜 정체현상을 나타내는 데에 있다. 그리고 경사 S자 유형은 개발초기에는 경제분산현상으로 지지한 성장속도를 나타내지만 개발중기에 이르러서는 경제사회의 안전기반의 확립에 힘을 입어서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17) 여기서 저개발수준의 경제사회는 세계은행이 'Low-income economies'로 분류한 36개 경제사회를, 그리고 선진수준의 경제사회는 'Industrial market economies'로 구분한 18개 사회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와같은 세계은행의 구분개념이 소수경제사회/다수경제사회는 대응개념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 된다. 다만 이 주장에 대한 계량적 자료제시는 다른 기회로 전가하는 것이다.

개발후기에 와서는 비록 성장율의 둔화현상을 면치못하지만 비교적 높은 소득수준에서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다.¹⁸⁾

그러므로 경제사회의 발전은 단기적으로 개발초기만을 생각한다면 집권관리전략이 조속한 성장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즉 개발후기까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경제사회의 발전을 논한다면 분권관리경제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유도할 수가 있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제기한 소수경제사회는 집권관리(Centralized Management)에, 그리고 다수경제사회는 분권관리(Decentralized Management)에 입각한 경제방식을 선택하는 것임은 실증의 필요도 없는 당연한 상관관계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¹⁹⁾

Ⅶ. 결론 : 한국경제개발전략의 전환

본 논문의 일차적 시도는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한국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공체가 주관하고 실행하여 온 일련의 5개년계획에 나타난 경제개발전략의 특성을 규명하여 보는 데에 둔 것이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는 '소수경제전략'으로 유형적 특성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결론이 얻어지는 것임이 판명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소수경제/다수경제'라는 새로운 대응개념에 근거를 둔 분석모형, 전략특성유형, 그리고 경제사회유형에 관한 가설적 이론들을 제시하는 다분히 학술적인 목적수행도 병합적으로 시도된 바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본 논문이 실증분석 및 이론화의 복합적 구성을 제시하는 까닭은 학술연구가 한국경제의 미래적 과제해결에 기여가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본 논문의 결론으로는 '소수경제/다수경제'를 이용하여 미래에 있어서의 한국경제개발전략의 전환특성을 고찰하여 보기로 하는 것이다.

이제 재설명의 필요도 없이 한국경제는 장기간에 걸쳐서 소수경제전략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온 것이므로 소수경제 사회의 유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오늘날 앞절에서 논급한 소수경제사회의 문제점들을 바로 현안의 해결과제로 등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소수경제의 특성으로 빚어지고 있는 과제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몇가지 지적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8) 경제성장의 유형에 관한 논자의 연구는 '경제성장유형에 관한 경영이론적 고찰', 「사회과학논총」(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68, pp. 104—162)이다.

19) 소수경제와 다수경제가 혼존하는 유형에서는 거시적으로는 소수경제원칙이,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다수경제원리가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상 대륙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개혁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 (a) 대외채무 총액의 과다(Excessive Foreign Debts)
- (b) 통화팽창추세의 지속화(Sustained Money-Supply Expansion)
- (c) 부실기업정리문제해결의 담보(The Delayed Dissolvment of Marginal Firms)
- (d) 무역제정 균형의 빈약(The Feeble Status of Trade Balance)
- (e) 소득격차의 심화(The Increasing Skewness of Income Distribution)
- (f) 경기불황대응력의 미약(The Weakness of Counter-Stagnation Adjustment)
- (g) 근로소득 증가율의 하회(The Declining Share of Labor Income)
- (h) 자본시장의 정상적 육성의 부진(The Deformed Growth of Capital Market)
- (i) 하도급금 지급물위의 빈발(The Malpractice of Firm Payment)

그러면 이와 같은 한국경제의 현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소수경제사회의 고질적인 특성에서 연유되고 있는 것인만큼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한국경제사회를 본질에 있어서 다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어야 함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앞으로의 한국경제의 정책전환은 본 논문이 주장하는 소수경제전략의 포기에 따른 다수경제전략의 영입이 된다는 것이다.

연이나 최근에 나타난 한국경제의 정책전환은 비록 초보적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변화를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1) 실업율의 감소와 관련된 중소기업육성의 가속화 (2) 부실기업의 정리촉진 (3) 재벌기업의 여신규제 (4) 지방경제의 자율적 개발체제의 강구 (5) 무역상사의 허가요건 완화 (6) 창업자본의 지원 (7) 중소기업주식의 장외 거래인정 (8) 제3금융권의 자율화 등등 실로 여러가지 방안들이 실행 또는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사회에 있어서는 선진경제사회 또는 다른 개발도상사회에서와 같이 다수경제에 관한 이론이 공식화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리고 지난 경제계획기간에 걸친 장기적인 소수경제전략의 결과로 형성된 일부사회층의 이해기득권(Vested Interest)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수경제전략으로의 실질적 전환은 많은 난관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1) 그리고 설사 다수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된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는 일단 소수경제와 다수경제의 현상들이 혼존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